

# 내외부 악재에 맥 못추는 민주당... '쌍특검' 돌파구 모색

이 대표 관련 인물 잇따라 극단 선택 여당, 비명계 집중포화... 사퇴 촉구 지도부, 정의당 공조 등 투쟁 방침

입지가 흔들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 실장 전 모씨의 죽음이란 악재가 겹치면서 당 지도부가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라고 표현하며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 대표는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나”라며 전 모씨의 죽음을 검찰 탓으로 돌렸으나, 이 대표와 관련된 사람이 4명째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전 모씨가 남긴 6장 분량의 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고 전형수 씨의 사망과 관련해 책임론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민주당은 원팀입니다 게시물이 보이고 있다. /뉴스시

서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과 이 대표에게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라’는 취지의 표현을 남기면서 이 대표에게 부담을 안겼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전 모씨의 빈소가 마련된 경기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았으나 밖에서 6시간 이상 대기한 끝에 짧게 조문하고 나왔다.

여당은 이를 빌미로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며 삽자포화를 퍼부었으며, 민주당 내부 비(非)이재명계도 우려를 나타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는 이쯤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란다. 주변의 고통과 생명, 그들의 피눈물에도 공감하지 못

하면 ‘패륜정치’ 아니겠나”라며 “귀먹고 눈멀고 심장까지 굳어버린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명계 대표주자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가 말한대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이라면 속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 대표 본인이나 주변에서 고인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 있었다면,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십년 넘게 자신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다.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비명계는 자체 회동을 통해 당내 상황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親)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SNS에 전 모씨의 부고를 두고 “참 좋은 분이셨다. 얼마나 억울하고 힘드셨나. 이제 영원한 안식이 있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 성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쌍특검’ 추진으로 3월 임시 국회에 임할 생각이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공천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총 11명 중 9명을 비명계 의원으로 배치하면서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불공정 공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 비이재명계는 당직의 대부분이 이재명계 의원들이 독식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인적쇄신을 요구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주에 3~5선 중진들과 연속 회동을 가지며 당내 분열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또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태우기 위해 정의당과 공조를 벌이는 등 대정부투쟁에도 나서고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김기현 지도부, 당직 인선 막바지... ‘연포탕’ 실현 이목집중

(국민의힘 당대표)

(연대·포용·탕평)

김 대표, 주요 당직 후보 접촉 사무총장에 이철규 의원 유력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가 이르면 13일 주요 당직 인선을 마치고 발표할 계획이다. 당 대표 당선 이후 첫 주말에 김 대표는 주요 당직 후보들과 접촉하며 막바지 인선 작업에 몰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총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등 주요 당직에 친윤(親尹석열)계 인사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김 대표가 밝힌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2일 국민의힘 상황을 종합하면, 사무총장은 재선의 이철규(강원 동해시 태백시삼척시정선군) 의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 살림살이를 챙기고, 내년 총선 공천 실무까지 챙기는 자리에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 주축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시

만든 공부모임 ‘국민공감’ 총괄 간사인 이 의원이 유력 인사로 꼽히는 것이다. 재선의 정성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도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정 의원은 정책위의장 후보로도 거론된다.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당의 전략·조직 관리 역할인 전략기획부총장과 조

직부총장은 조선 박성민(울산 중구), 배현진(서울 송파구),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여당 정책 사령탑인 정책위의장은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이르면 13일 먼저 발표하는 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장은 과거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의원들이 직접 선출했으나, 현재는 당 대표가 지명하도록 돼 있다. 이 자리에는 사무총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 정성식 의원과 함께 재선의 류성걸(대구 동구갑), 송인석(경북 김천)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당 대표가 결정하는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의 경우 재선의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의원과 김석기(경북 경주시)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현재 지도부에 TK(대구·경북) 인사는 김재

원 최고위원 한 명으로, 원내에서 보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배경 때문이다.

수석대변인은 지명직 최고위원 후보로도 하마평에 오른 이 의원이 거론된다. 대변인은 원내에서 조선의 강민국(경남 진주시을), 이용(비례대표) 의원, 최형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의원이, 원외의 경우 윤희석 김기현 후보 캠프 공보총괄본부장과 김예령 캠프 수석 대변인이 각각 거론된다.

하마평에 오르거나 거론되는 주요 당직 인선을 보면, 친윤계 인사 위주로 확인된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가 특정 계파 일색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김 대표가 경쟁자로부터 ‘수도권에 취약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고, 대통령실과 친윤계 지지까지 받아 당선된 만큼 특정 계파 인사만 당직에 인선하는 게 부담일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지난 10일 “연대와 포용과 탕평을 통해서 당을 대통합 하겠다고 했는데, 구두 약속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직 인선에서 연대·포용·탕평 기본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힌 김 대표는 당시 국회에서 진행한 정책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질서 있는 다양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우리 속에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분수처럼 표출되고, 그것들을 격의 없이 밤샘 토론한 뒤 결론이 나면 함께 수렴하고 원팀 할 수 있는 질서 있는 다양성이 우리 당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같은 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지도부가 그렇게 구성된 것은 당원들이 선택을 한 것”이라며 친윤 중심으로 당 지도부가 꾸려지는 데 대한 지적에 반박하면서도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은 당 대표가 뜻을 함께하면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숙고해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 대통령실 “바이든 대통령,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협력 요청”

윤 대통령에 세션 주제 초청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국으로서 협력을 고대하고 본회의 세션 중 하나를 주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에게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고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초청장에서 “우리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다”며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이 지금 내리는 결정들은 향후 수십 년간 전 세계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3월 윤 대통령님과 코스

타리카, 네덜란드, 잠비아와 함께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를 위해 함께 협력하기를 고대한다”며 “금번 정상회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민주주의가 어떻게 모두를 위해 계속 기여해 나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고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패 대응에 있어 도전과 진전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및 민간 대표들이 참석하는 장관급 지역회의를 2023년 3월 30일 개최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윤 대통령님께서 3월 29일 정상회의 본회의 5개 세션 중 하나를 주제하셔서 정상회의의 시작을 알리고 전 세계 민주주의의 힘과 잠재력에 대

해 진솔한 대화를 촉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만간 한국 측에 추가 상세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며 “이번 정상회의의 공동주최는 민주주의가 우리가 공유하는 열망이자 책임이라는 진실임을 강화하면서 이는 우리 모두가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3월 그리고 향후 윤 대통령님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시키고, 인간의 잠재력을 발휘하며 우리 모두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 협력해 나가기를 고대한다”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함께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민주당 “강제징용 해법, 미래지향적 결단 세뇌”

“친일 굴종외교 약속 들은 바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국민계 약속한 공약이자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사 문제를 절단내 놓고 미래지향적 결단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려는 것인가. 국민은 친일 굴종외교를 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을 들은 적 없다”고 반발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굴종외교는 국민과의 약속을 깬 대선공약 파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강제징용 해법을 ‘김대중-오부처 정신’을 계승한 것이라고 한다”며 “일본 측의 반성과 사

죄의 문구 하나 없는 이번 배상안이 정녕 ‘1998년 10월 한일공동선언’의 정신을 받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공동선언문을 한 줄이라도 읽어보기는 했나”라고 반문했다.

임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굴종 강제동원 문제 해법은 강제징용을 했던 일본이 되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만들었다”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총리의 초청장 한 장에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했으니,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라.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시작부터 굴종외교의 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문제를 제자리에 돌려놓으시라”고 촉구했다. /박태홍 기자